독감 의심환자 확산 학교 '비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새학기 시작 앞두고 바짝 긴장

독감 의심환자 수가 이번 겨울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7주차(2월 7~13일)에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나타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외래 환자 1천명당 53.8명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한 주 전(1천 명당 41.3명)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이번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수준(1천명당 11.3명)의 약 4.8배를 넘어서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감기와는 다른 병이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 등은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연초부터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동네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다시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아 종합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독감 의심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환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세가 3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독감 유행에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 사이에 독감이 크게 번지면서 신학기 학교에도 독감 유행이 번질 경우, 특별한 대책도 없어 학부모들에게 독감 완치 때까지 등교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시군 보건소에도 독감 예방접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독감 유행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에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법으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노영기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3차회의

민선6기 2차년도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건식 김제시장) 제3차 회의가 지난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건식 김제시장 등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다.

병원 마약류 훔쳐 투약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 금고에서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 등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술집 도우미 독점 공급 보도방연합회 일당 검거

전주시 중화산동과 아중리 일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독점 공급한 보도방연합회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전주시 우아동과 중화산동에서 보도방연합회를 만들어 도우미를 술집 등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조직원 심모(3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우미 박모(3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주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인 '아중리·중화산동' 보도방연합회를 만들어 도우미 박씨 등 20여명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전략 제시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전도시 실무분과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안전증진사업 부서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가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아주대·백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기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앞서 전주시의 사망과 사고 등 안전 손상문제에 대한 분석과 각종 안전사업에 대한 방향도 설정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 공동책임연구원인 백경원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전주시 손상발생 현황과 유발요인 분석자료를 근거로 손상지표에 따른 손상예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증진 프로그램 선정,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추진전략은 △안전조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의 역량강화 △시민 안전증진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기반 마련 △실효성 있는 핵심 목표지표 선정을 통한 지역안전수준 향상 △각 사업별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손상·사망률에 근거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낙상 및 생활안전, 학교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안전증진 방안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따른 7가지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1인당 최대 매주 5만원 · 월 20만원까지

전주시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보다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부터는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전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 및 전단지 등이다.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현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내달 11일까지 유치원 · 어린이집 · 산업체 등 89곳 대상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신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이번 위생점검은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업체 등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89개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단급식소의 무표시 무허가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요령 등 현장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은 "집단급식소는 다수가 이용하는 위생업소인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아내 폭행 치과의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2014년 5월까지 B씨를 6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때려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5월 전주 자택에서 장모 C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C씨의 머리와 배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